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1999년 5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 조정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조용직)은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를 인상(1997~98 평균 18.2%)하였으나, 보험급여비 증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함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보험급여비 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18.4% 인상(연평균 전년대비 11.8% 인상)할 계획이다.

- 1998년도 지역보험재정 수지현황은 수입 3조 6591억원, 지출 3조 8163억 원으로 당기적자 1572억원이며, 최근 5년간 보험료수입 증가율은 16.8%인 반면,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1.3%임. 따라서 1998년도 보험료를 100으로 볼 때 급여비는 113으로 수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
-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시에는 1999년도에만 5223억원의 당기적자를 발생시켜 1999년도말에는 적립금 규모가 2055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1998년말 적립금 7278억원)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비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
- 의료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여 온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저 부담 저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면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나, IMF체제 하에서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보건의료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

- 그러나 국민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료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보험급여비 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험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사항임.
- 외국 선진국들은 이러한 보험재정 적자해소를 위해 이미 1970년대부터 의료비 억제정책과 재원확보 대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의료수요 및 의료공급 억제 측면과 동시에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통한 보험료 수입의 확대, 의료보험 목적세 도입 및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보험급여비 상승의 주요원인으로는 매년 5~17.6%의 보험수가 인상, 수진율 급증,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연도별로도 지역보험료는 1995년 15,508원(6.8%), 1996년 17,918원(15.5%), 1997년 22,441원(25.2%), 1998년 25,625원(14.2%)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인상되어 왔음.
- 이번 보험료 조정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 보험료 조정을 연기할 경우 의료보험가족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인상시기를 1월이 아닌 5월까지 지연시켰고, 인상률도 연간 급여비 소요액만을 감안하여 최소한에 그친 것임.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9만명을 추가로 선정·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19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된 이 계획에 따르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수를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확대하여 보호하게 된다.

- 이번 대책은 특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1~2급 장애인 및 중복지장애를 가진 3급 정신지체인 약 9,600여 명에게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한시적 자활보호장애인의 본인부담분 의료비가 지원되며, 경증장애인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도우미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실시됨.

- 자활보호대상자 및 61세 이상 저소득 실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된 소득을 지원하는 특별취로사업을 4만 2천명에서 6만 3천명으로 확대 실시함.
- 노숙자보호사업 예산도 증액하여 실직노숙자들의 조기 사회복귀와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게 됨.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대상자 및 복지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 1,200명을 7월부터 확대 배치하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 시행 공공근로사업은 50억원을 증액하여 총 8개 사업에서 보건복지 증진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1만 2천여 명의 실직 여성근로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지원하게 되며,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이 신규로 실시됨.
-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결식학생들을 위한 중식지원사업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직자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사업의 예산도 각각 121억원, 700억원이 증액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됨.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생산품 관보공고 등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로부터 관보공고 의뢰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1999년 5월 중에 이를 고시하고 관보에 공고하게 되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전반, 면장갑, 문구류 등이 포함된다.

- 종전에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지원 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고, 그 책임이 개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단체에 있었음. 그 결과 1998년 한 해 동안 조달청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것은 9억여 원에 불과함.

- 이번 조치로 장애인생산품을 보건복지부가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30억원 이상 조달구매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지속적인 일거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1999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부터는 장애인생산품 중 일정품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 발주지정제도가 도입·추진됨. 이를 통해서 일정품목은 전략적으로 육성,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됨.